경제관계장관회의
18-11

공개

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

2018. 7. 18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상반기 경제운용평가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향후 경제 여건 ····· 2

Ⅲ. 정책방향 ····· 6

1. 일자리·소득분배 개선 ····· 7

2. 혁신성장 가속화 ····· 9

3.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····· 10

4. 거시경제 활력 제고 ····· 11

〔첨부〕 경제전망 ····· 13

Ⅰ. 상반기 경제운용평가

□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,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

○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,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,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등 소득주도 성장 추진

* 청년·신혼부부 등 주택금융 지원 강화,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,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

○ 혁신모험펀드·인프라 조성 등 통해 창업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8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착수

○ 순환출자고리 해소,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경제질서 확립 추진

*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(2월), 대리점 불공정거래 근절대책(5월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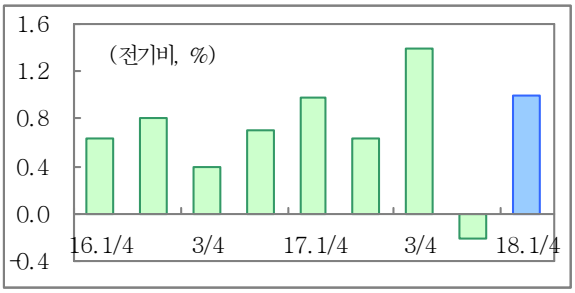
○ 성장·부동산·물가·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

▪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3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고, 한미 FTA 재협상 등 대외 리스크 관리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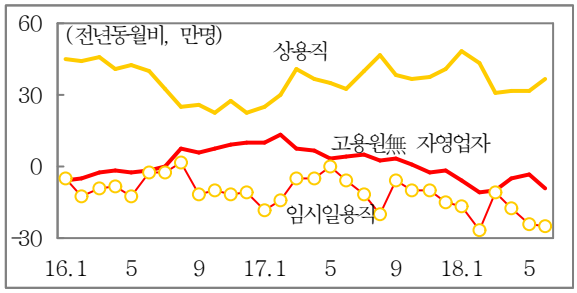
□ 다만,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기업 활력 약화, 이해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 부족

○ 반도체 편중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, 저소득층 일자리·소득 개선이 지체되고, 양극화 등 민생 어려움 지속

분기별 GDP 흐름



취업자 증감 추이



Ⅱ. 현황 및 향후 경제 여건

1. 경 기

1 외형적 경제성장에도 불구, 지표와 체감간 괴리 확대

○ 세계경제 개선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며,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,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

* 수출(1~6월)/설비투자(1~5월) 증가율(%) : (전체)6.6/4.8 (반도체 제외시)0.0/△1.4

○ 소비는 외형상 증가에도 불구, 내수밀접 소비는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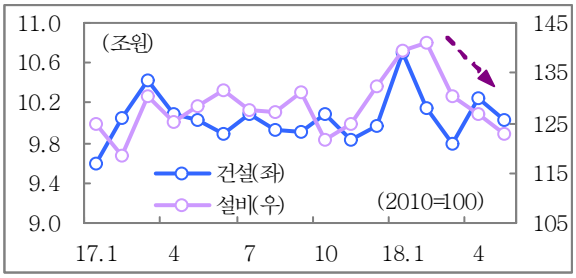
* GDP증가율(전년비, %, '17→'18.1/4) : (민간소비)2.6→3.5 (숙박음식)△2.2→△2.7
* 1/4분기 해외소비 7.3%(국내소비 2.9%), 수입차 28.7%(국내차 △1.0%)

2 향후 대내여건은 추경 집행 등에도 불구, 경기 불확실성 확대

○ 그간 성장에 기여해온 건설·설비 등 투자부진 지속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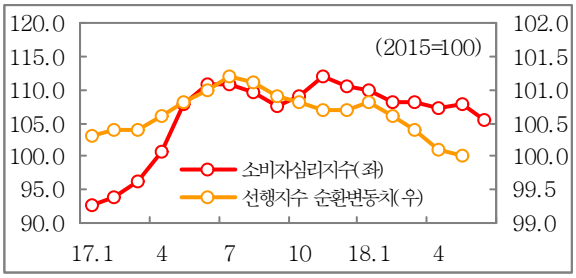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, 소비심리 등은 등락이 있으나 조정받는 모습

설비·건설투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



* 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3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나, 하방리스크 확대

○ 美中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시 직·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, 유가 상승은 내수 부담요인

○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시 실물·금융 등 영향 우려

2. 일자리 / 소득분배

1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, 분배상 어려움도 지속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('16)23.1 ('17.上)36.0 (下)27.2 ('18.1/4)18.3 (4)12.3 (5)7.2 (6) 10.6
* 5분위배율(1/4분기 기준) : ('16)5.02 ('17)5.35 ('18)5.95('03년 이래 최고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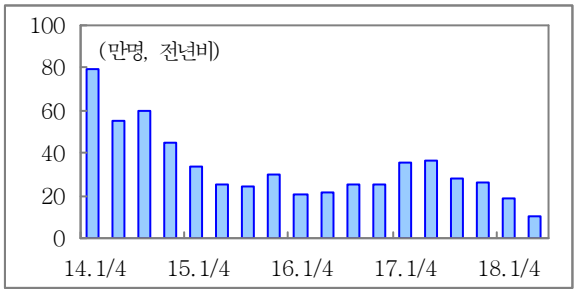
2 향후에도 당분간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

○ 주력산업 부진,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며 고용 증가세 제약 전망

* 생산가능인구(만명, 전년비): ('15)18.7 ('16)13.4 ('17)2.1 ('18.上)△6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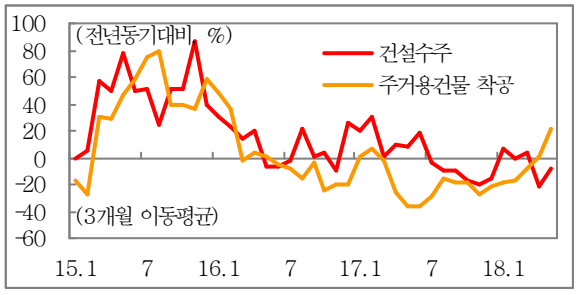
○ 청년일자리 대책 및 추경 집행 본격화 등은 상방요인이나, 건설경기 조정 등은 하방요인

취업자 증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건설수주 및 주거용건물 착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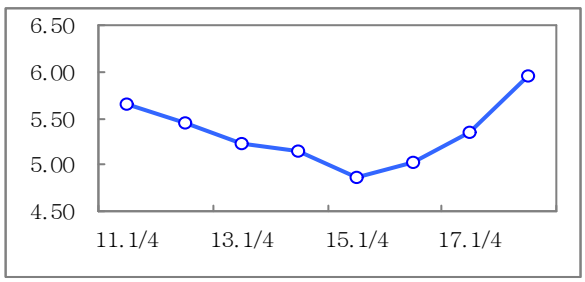
* 자료 : 통계청

3 분배는 구조적 제약요인 등 감안시 단기간내 개선에 한계 우려

○ 고령화, 온라인화·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·일용직 감소, 영세자영업자 업황 부진 등이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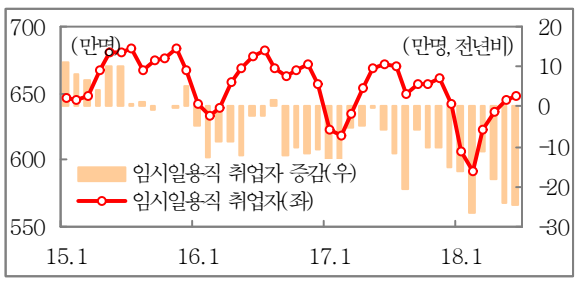
* 65세이상 비중 전망(%, 장래인구추계) : ('18)14.3 ('20)15.6 ('25)20.0 ('30)24.5

5분위 배율 추이(1분기)



* 자료: 통계청

임시일용직 취업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3. 구조적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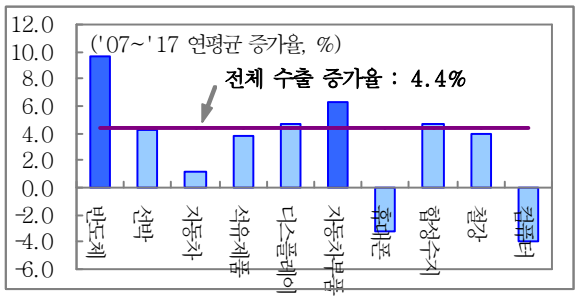
1 주력산업 부진 지속,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

○ **반도체** 등을 제외한 **차·조선** 등 **대부분 주력업종**의 대내외 **수요둔화**와 **경쟁력 약화**로 **경제·산업 구조 취약성 심화**

○ **규제혁신**이 **지연**되며 **신성장동력 발굴**이 **지체**되고, 최근 **신규창업**이 증가하나 **고부가가치 분야 창업**은 **미흡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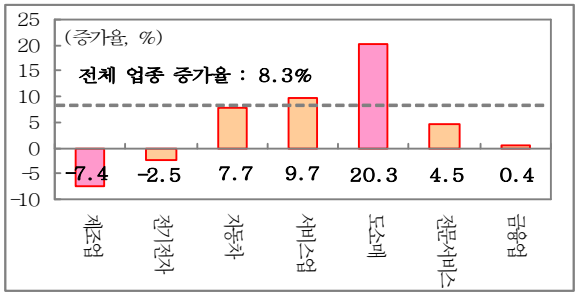
* 규제환경지수(WIPO, '18) : (싱가폴)98.6<1위> (미국)93.0 (일본)90.6 (한국)72.2<45위>

최근 10년간 주력업종 수출 추이



* 자료 : 관세청

업종별 신규창업 증감(1~5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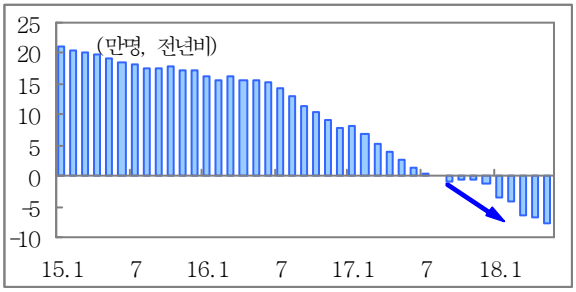
* 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

2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우려

○ **생산가능인구 감소**가 **가속화**되며 **노동공급제약** 등 **경제전반**에 **부정적 영향**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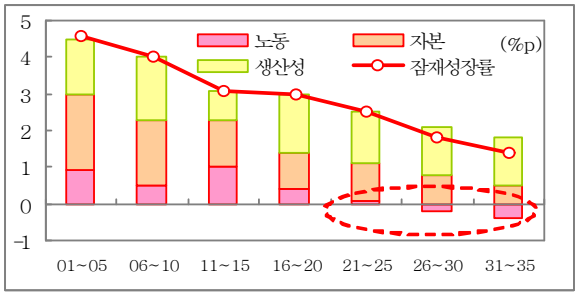
○ 향후 **노동의 성장기여**가 **어려운 가운데**, **지속 성장**을 위해서는 **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**가 필수

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잠재성장률 추이



* 자료 : KDI

4. 경제전망

□ (성장) ‘18년은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**2.9% 수준 성장** 전망

○ **투자**가 **부진**한 가운데, **미중 무역갈등 심화, 유가 상승** 등 대내외 **리스크 확대**로 하반기 **수출·소비 회복세 다소 둔화** 전망

□ (고용) **‘18년**은 **인구감소 본격화·구조조정** 등의 영향으로 **취업자 증가폭**은 전년보다 감소한 **18만명 수준 전망**

* 주력산업 구조조정, 서비스업 부진 심화 등으로 상반기 고용이 큰 폭 위축 (‘17.上: 36→ ‘18.상: 14만명)되며, 당초 전망대비 취업자 증가폭 하향

○ **고용률**은 전년(66.6%)보다 **다소 개선된 66.9%** 예상

□ (물가) **‘18년**은 **유가 상승** 등에도 **불구**하고, **농축수산물 가격** 등이 지난해보다 **안정**되며 **1.6% 상승**

□ (경상수지) **‘18년**은 유가 상승에 따른 **원자재 수입 확대** 등의 영향으로 **’17년 대비 감소**한 **640억불** 전망

	‘17년	‘18년	‘19년
■ 경제성장률(%)	3.1	**2.9**	**2.8**
■ 취업자증감(만명)	32	**18**	**23**
■ 소비자물가(%)	1.9	**1.6**	**1.8**
■ 경상수지(억불)	785	**640**	**630**

◇ 우리경제가 **잠재수준 성장**을 지속하고, **일자리 창출력**을 **강화**할 수 있도록 보다 **긴 시계**에서 **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**에 총력

⇨ 정책적 노력을 통해 **3% 성장경로**로 가도록 **최대한 노력**

Ⅲ. 정책방향

◇ 지난 1년간 **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**에 **착수**하여 **초석**을 **마련**하였으나, **체감·효과 측면**에서 **미흡**

○ 앞으로는 **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착근**에 **초점**을 두고 경제운용

◇ **소득·고용·삶의 질**에 걸쳐 **"성장의 포용성"**이 높아질 수 있도록 **소득주도성장**(총수요), **혁신성장**(총공급), **공정경제 등 과제**를 **"속도"감 있게 추진**하여 **국민**이 **"체감"**할 수 있는 **"성과" 창출에 주력**

❶ EITC 확대 등 **사회안전망 지속 확충,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**

- **고용창출력**과 **인구·산업구조** 등 **추세적·구조적 변화**를 재점검하여 **업종별·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·추진**
- **주거·교통·안전·환경** 등 **삶의 질 개선** 위한 **기반투자** 확대

❷ **핵심규제 획기적 개선** 등 **경제·사회 전반 혁신 가속화**

-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촉진을 위해 **하반기중 입지·공유경제 등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** 추진
- **4차 산업혁명** 등에 대응한 **사람·지역·산업**의 **혁신역량 강화**
- **메가 투자프로젝트**(가칭) 선정, **예산·세제·금융** 집중 투자

❸ **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**를 위한 **개혁입법 추진, 불공정거래 근절** 등 **공정경제 정착**을 위한 대책 꾸준히 추진

❹ **승용차 개소세 인하, 약 4조원 재정보강** 등 **거시경제 활력제고**

- **내년도 예산**은 **당초 계획보다 확장적**으로 **운용**
- **글로벌 통상마찰, 미 금리인상** 등 **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**

◇ **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책 추진**으로 **정책효과 지속** 유도

(1) 일자리·소득분배 개선

1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, 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신속 추진

○ **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**

* 연령기준 폐지, 재산 2억원 미만(現 1.4억원), 중위소득 65% 이하(現 50%)까지 지원

* 최대지급액(만원) : (단독가구) 85→150, (홑벌이) 200→260, (맞벌이) 250→300

○ **실업급여 지급액·지급기간을 확대**하고, **예술인·특수고용직**(보험설계사 등) 등 **고용보험 가입대상**도 **단계적 확대**

*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(지급수준: 평균임금 50→60%, 최대 수급기간: 8→9개월)

▪ **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**하고, **한국형 실업부조** 도입 추진

○ **기초·장애인연금 25만원**(9월), **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**(10월)

▪ '19년에는 **소득하위 20%**는 **기초연금 30만원 지원**, **기초생보**(생계급여) **부양의무자 기준**을 **조기 완화**

○ **영세자영업자**는 **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**(0%대 수수료) 등으로 **경영부담 완화**, **재창업·전직 지원** 등 **안전망 강화**

▪ 소상공인 등에 대한 「**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**」 마련(연내)

▪ **상가 임차인**은 **10년까지**(現 5년) **계약갱신요구권**을 **보장**, **철거·재건축** 등으로 갱신거절시 **임차인 보호방안** 마련

2 고용창출력 재점검을 토대로, 업종·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

○ **인구·산업구조 등 추세적·구조적 변화**를 면밀히 검토하여, **민간부문 일자리**를 **창출**할 수 있는 **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**

* 투자유치 제도 개편(7월), 의료기기 산업 규제개선 방안(7월) 등

○ **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** 성공모델 발굴·확산 추진

○ 청년일자리 **추경사업 신속 집행, 신중년 적합일자리** 지속 **확대**

○ **공공·사회서비스** 등 **공공부문 일자리 확대**('22년까지 81만명)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**마중물 역할 강화**

3 주거·교통·안전·환경 등 삶의 질 개선 위한 기반투자 확대

○ **청년·신혼부부** 등 **무주택 서민**에 대한 **공적주택 공급 확대**, **도시재생 뉴딜사업** 본격 추진

*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추진(하반기),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 선정(8월)

○ **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**, **버스 준공영제 확대** 검토, **노후 주거·교통시설 교체·보수**, **안전·환경개선 설비 보강**

*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 마련 예정('18년 하반기)

○ **건강보험 보장성 강화**, **교통·통신요금 부담 완화** 방안 마련

* 뇌·혈관 MRI 급여화(9월),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(12월)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
*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마련(8월), 알뜰폰 활성화 추진(하반기) 등

○ **아이돌봄서비스** 및 **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** 지속 **확충**

* 돌보미 2.3→4.3만명(~'22), 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 등 비중 40%까지 확충(~'22)

4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,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·지원 병행

*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 마련

○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**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해 '19년에도 **일자리 안정자금**은 **금년도 범위 내**에서 **지속 지원**

* 지원대상·요건·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'19년 예산안에 반영

○ **노동시간 단축 연착륙** 위해 **취약 사업장·업종 집중 지원**

○ **비정규직 차별해소**, **임금정보 활용 활성화** 등 통해 **임금격차 완화**

○ **실업급여 확대** 등 **안전망 확충**을 토대로 **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** 등 **노동시장 구조개혁 병행**

(2) 혁신성장 가속화

□1 8월중 **시장·일자리 창출효과**가 큰 **핵심규제 선정·발표**, **하반기 중 입지·공유경제** 등 분야의 **규제개선 추진**

○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**그간 사회적 논의**조차 어려웠던 **장기 미해결 규제혁신**을 위해 **범정부적 차원**의 **역량 집중**

○ **핵심규제별 개선 추진상황**을 **정례점검**(필요시 대통령 주재), **연내성과 창출 달성**

○ **규제샌드박스 5법** 등 혁신성장·규제혁신 관련 **입법 연내 마무리**

□2 **기업** 등의 **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·지원**, **창업 활성화**

○ **인·허가 장기화** 등 **행정절차 지연**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**투자 프로젝트**는 **투자실행**까지 **집중지원**, **일자리 창출**로 연결

▪ **관계부처 합동 투자 캐러반** 등을 통해 **현장애로 즉시 해소**

○ **지역 고용창출**, **신산업 육성** 위해 **투자유치 지원제도** 개편(7월)

○ **창업 추경예산**(0.7조원) 신속집행, **기술·생활혁신 창업지원**으로 **신설법인 12만개** 달성, **M&A·회수시장 활성화**를 위한 **펀드 확대** 검토

□3 **미래 먹거리 창출** 위해 **유망분야 지원**, **제조업·서비스업** 등 **업종별 혁신**, **메가 투자프로젝트**(가칭) **선정·지원 추진**

○ 미래차 등 **8대 선도사업**에 **인프라**, **공공수요 확대** 등 집중지원, **블록체인 선도**를 위한 **R&D 확대**, **공공분야 시범사업** 추진

○ **자동차, 석유화학** 등 **주력산업 혁신** 지속 추진

○ **공유경제·관광·의료** 등 **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** 마련

* 공유경제 활성화방안(8월),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(8월) 등

○ **메가 투자프로젝트 선정**(가칭), **예산·세제·금융** 등 **집중 투자**

* 혁신성장 동력, 성장잠재력,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선별, 정부·기업·연구기관으로 작업반 구성,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선정

4 **4차 산업혁명,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** 등을 감안하여 미래가 요구하는 **인적역량 강화 시스템** 마련

○ **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, 선취업-후학습 방안** 마련(7월)

* 4차 산업혁명 대비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및 유망분야 우수인력 양성 등

* 취업선도형 직업계고 시범운영,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전형 신설 등

5 **중앙·지방정부 협력체계**를 강화, **지역·생활밀착형 정책** 추진

○ 창경센터·테크노파크·지역대학 등과 **지역혁신체계 구축**

○ **지자체**가 **단기·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**을 **수립**하고 **중앙정부**는 **재정지출, 세제감면** 등 **매칭지원**

* 지역 밀착형 예술·체육·문화시설 확충,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 등

(3)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

1 **다중대표소송제 도입, 전자투표제 의무화** 등 **개혁입법 가속화**

○ **대기업 집단**의 **경제력 집중, 일감몰아주기 규율**(공정거래법)

○ 대기업 **금융사**를 통한 **비금융계열사 부실지원 방지** 추진

* 통합감독체계 시범운영('18.7~)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마련 추진

2 **하도급·유통·가맹·대리점** 등 **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**

* (하도급) 구조조정 부담전가 가능성이 높은 분야, (대규모 유통) TV 홈쇼핑 점검, (가맹) 구입강제 등 핵심 애로점검, (대리점)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 점검

○ 기술선도업자의 **지재권 남용**, 대기업의 **기술탈취 행위 차단**

3 서민·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

○ 복잡하고 중복적인 **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**하고,
채무조정 조기지원, 감면율 확대 등 **신용회복지원제도 정비**

* 4대 서민금융상품(미소금융, 햇살론, 새희망홀씨, 바꿔드림론)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

○ **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, 불완전판매 방지, 분쟁조정** 등

4 대-중소기업, 중소기업-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 촉진

○ **대-중소기업** 간 **협력이익공유제 도입·확산**

* 협력이익공유제 도입·확산 방안 마련(8월) → 시범 도입 및 법제화('18.下)

○ **중소기업 근로자**에 대한 **경영성과급 지급** 등 **성과공유제 확산**

*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및 세제혜택 등 우대지원 방안 마련('18.9월)

○ **상생협력, 일자리 창출, 사회적가치 실현** 등 **기업책임경영 확산**

(4) 거시경제 활력 제고

1 기금변경 등 약 4조원 규모 재정보강 등을 통해 내수활력 제고

○ 승용차 **개별소비세 인하**(5→3.5%), **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**

* 조기폐차 지원('18년 11.6→'19년 15만대),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% 감면

○ **기금 변경, 공기업 투자** 등 **약 4조원 규모**의 **재정 보강**

▪ **주거·신성장** 분야 및 **위기업종·취약계층 지원** 확대,
안전설비·미세먼지 저감 설비 확충 등

○ **목적예비비 활용**한 **구조조정 업종·지역** 지원 확대

* 선박건조 등 안정적 수요 확보, 부품·기자재 R&D 지원, 협력업체 컨설팅·수출 지원 등

2 재정은 중장기 지속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적 기조 유지

○ '19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

* 2017~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 : 5.7%

○ 일자리 창출, 혁신성장 지원,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

○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 마련

*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해 집행실적·사업성과 점검 등 원점 재검토

3 통상분쟁,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응

○ 미·중 관세부과, 미국 자동차 안보조사 등 통상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

▪ 수출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, R&D 강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

▪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 가입여부 조속 결정

○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,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실시

▪ 국내금리 동반 상승에 대비, 서민·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

* 중금리(사잇돌)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 및 한도 확대(9월), 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(12월) 등

⇨ 저소득층 일자리·소득지원 대책(7.18일)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·추진

첨 부 **경제전망**

2018~2019년 경제전망

(전년동기비, %)

	'17년 실적	'18년e		'19년e
		1/4	연간	연간
전망 전제				
세계경제(PPP)[1]	3.7	-	3.9	3.9
Dubai 유가($/bbl)	53	64	70	67
실질 GDP	3.1	2.8	2.9	2.8
민간소비	2.6	3.5	2.7	2.7
설비투자	14.6	7.3	1.5	2.0
건설투자	7.6	1.8	△0.1	△2.0
지식재산생산물투자	3.0	3.5	3.0	3.0
경상 GDP	5.4	3.5	4.0	4.4
취업자 증감(만명)	31.6	18.3	18	23
고용률(15~64세, %)	66.6	66.0	66.9	67.2
소비자물가	1.9	1.3	1.6	1.8
경상수지(억달러)	785	118	640	630
상품수지(억달러)	1,199	239	1,090	1,060
수출(통관,%)	15.8	10.1	5.3	2.5
수입(통관,%)	17.8	13.6	11.2	2.9
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수지(억달러)	△414	△121	△450	△430

1」 IMF World Economic Outlook('18.7월)